

## ‘협력사 사망사고 파장’...기아 ‘도미노’ 가동중단 우려

하루 2000대 생산 차질...150개 협력사도 추가 중단될 듯  
 “장기화면 광주 경제 44%달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 마비”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협력사 안전사고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지역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광주지역 자동차 생산업체에 따르면 광주 북구 소재 기아 1차 협력업체인 풍기산업 광주공장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이 중지되면서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은 물론, 다른 협력업체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풍기산업에서 생산하는 샷시 차체부품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난 7일 오후 9시부터 버스와 군수차량을 생산하는 하남공장을 제외하고 1,2,3공장 생산라인이 멈췄다.

이에따라 스포티지를 비롯해 쏘울, 셀토스, 봉고트럭 등을 생산하는 기아 광주공장은 하루 2000여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협력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라서 생산중단이 지

속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아 광주공장의 가동중단 여파가 다른 협력사로 도미노 가동중단 사태로 이어질 조짐이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는 생산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기아 광주공장이 생산라인을 멈추면서 또 다른 모든 협력업체들 역시 가동이 이미 중단되거나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기아 광주공장은 1차 50여개를 비롯해 2차까지 하면 총 150여개 협력사가 있으며 1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자동차 산업 특

성상 기아 광주공장 라인 중단의 여파가 협력사까지 미치고 있다”면서 “가동중단이 장기될 경우 지역의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다른 경제계 인사는 “협력사 안전사고로 인해 기아 광주공장이 가동중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안다”면서 “노동 당국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파장을 감안해 조속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2018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생산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6%, 종사자수는 1만5960명(24.8%)에 달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조형물. (사진 =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제공)



늦가을 정취 가득한 담양 관방제림 6월 전남 담양군 관방제림을 찾은 관광객이 걸어 가는 가을 경취를 만끽하고 있다.

## ‘지반 침하’ 광주 지산나들목 우회도로, 원인은 ‘부실 공사’

시공사 성토 작업 제대로 진행안해

광주 동구 지산동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개통됐다가 지반 침하로 한 달여 만에 폐쇄된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 왕복 2차선 도로의 문제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결론났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지산나들목 진출로~조선대학교 사범대 우회도로 지반 침하와 관련해

복구 전담팀을 꾸려 확인한 결과 미흡한 성토 작업 등 부실 공사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동구는 사업비 4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지산동에서 조선대를 관통하는 545m 구간·10m 폭 규모의 왕복 2차로를 조성했다.

지난해 4월 착공 이후 1년여 만인 올해 5월 준공해 6월 개통했으나 7월 11일 일부 구간에서 폭우로 인한 지반 침하가 확인돼 개통 한 달여 만에 폐쇄됐다.

해당 도로는 지표면으로부터 9m 가량 흙을 쌓아 올리고 단단하게 다지는 성토 작업을 진

행한 뒤 그 위에 아스콘을 덮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성토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폭우에 따른 지반 침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성토 작업이 완료된 지반을 감싸는 옹벽 일부 구간도 지반 침하로 인해 개통 시점 기준보다 13.1cm 가량 기울었다.

또 해당 도로가 현행 기준인 시간당 70mm 배수량으로 지어진 탓에 당시 시간당 80mm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침수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토요일 쉽다 홈페이지 i-honam.com

## “국가 미래 어디가고 초거대도시 서울이나...철회하라” 강력 규탄

광주·전남 6개 시민단체 “지방 분권·균형 발전부터”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며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등 지역 6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구상은 집권여당이 남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경쟁을 할 수 없다. 입법·사법·행정 모든 분야에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포진해있는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강력하게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초거대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은 더 강화된 구심력을 갖고 인근 인천·경기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충청·영남·호남권 인구를 더 강력하게 흡수, 2000만 인구의 서울 공화국을 만들게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정쟁 확산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내년 22대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은 어불성설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즉각 중단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조속한 확정·실행 ▲지방분권 강화·균형 발전을 위한 공론장 마련 등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와 지방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지방분권전남연대·균형발전연구원·분권자치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변용일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